

규제개혁지수 작성을 통한 규제개혁의 산업경제적 효과 분석*

이 민 호**

논문 초록

적극적인 정부의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 효과에 대한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규제비용부담의 측정이나 규제개혁의 기대효과 추정과 다른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정책성가를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지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이르는 10년 간의 규제개혁지수를 작성하여 규제개혁지수와 국가산업경제 지표 간의 비교를 통해 우리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규제개혁을 통해 사업체의 수익성 및 규모 등을 중심으로 단기적 시점에서의 기업경영개선 효과를 일정 수준 확인되었다. 다만 규제개혁의 효과가 단기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그 효과의 내용이나 정도 면에서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규제개혁에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핵심 주제어: 규제개혁, 규제완화, 정책효과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G18

투고 일자: 2016. 6. 30. 심사 및 수정 일자: 2016. 7. 11. 게재 확정 일자: 2016. 7. 18.

* 본 논문은 2015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수행된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분석”의 연구 수행 결과를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혀둔다.

**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e-mail: mhlee@kpa.re.kr

I. 서론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의 퇴조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개혁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 김영삼 정부 이래 모든 정부에서는 최상위 국정목표로 규제개혁(regulation reform or deregulation)을 제시하였으며, 현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가발전의 최우선 동력으로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최근의 계속되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규제강화의 흐름도 다소 나타나고 있으나(Koske et al., 2015), 여전히 국가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가장 비용효율적인 정책도구로서 규제개혁에 대한 강조를 확인할 수 있다(Landy, Levin and Shapiro, 2007; Joskow, 2009; Shapiro and Borie-Holtz, 2013). 어느 누구도 정부 규제가 기업에 특별한 부담을 야기한다는 점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을 것이며, 실제로 이러한 규제비용(regulatory costs)이 엄청난 기업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많은 연구들에서 보고하고 있다(Parent and Prescottte, 1999; Crain and Hopkins, 2001; Nicoletti et al., 2001; Alesina et al., 2003; Loayzar et al., 2004; Djankov et al., 2006; Dawson and Seater, 2013; Crew, 2014).

그러나 규제비용에 대한 많은 실증적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이 우리 국가산업경제에 어떠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Hahn and Hird, 1991). 이는 규제개혁이 단순히 규제가 없는 가상적(counter-factual) 현실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기인하며, 규제개혁을 다수의 정치가들과 이해집단이 어울려 이루어지는 또 다른 형태의 정책적 개입이라고 간주한다면 규제개혁에 정책적 효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Shapiro and Holtz, 2013).

실제로, 지난 2000년 산업연구원에서는 1998년 시행된 규제개혁 조치를 통해 향후 10년간 연평균 0.64%p의 성장률 개선을 예상하였으며, 2005년 KDI의 연구에서도 OECD 42개국의 규제지수와 경제성장률 간의 비교를 통해 평균 수준의 규제개혁을 달성하더라도 연평균 0.5%p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청사진 속에 대대적으로 추진된 지난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2010년도 전경련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에 따른 투자촉진에 대한 규제개혁의 기여도에 대해 단지 33.7%의 기업들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최근 2015년도 대한상공회의소의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에서는 100점 만점에 38.1점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낮은 체감도의 원인으로 규제개혁의 후속조치 미흡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규제개혁의 효과를 단순히 기존의 규제비용부담 측정을 통해 역산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규제비용부담의 측정과 다른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정책성가를 평가하고자 한다. 물론 기존의 연구나 정부자료를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많은 평가와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정량적인 규제개혁지수를 활용하여 규제개혁지수와 국가산업경제 지표 간의 비교를 통해 우리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제Ⅱ절에서는 규제비용의 측정을 포함하여 규제개혁의 성과분석과 관련한 기존 선행연구들과 함께 규제지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론적 접근을 시도한다. 제Ⅲ절에서 실증적 자료수집과 전문가 평가를 바탕으로 산업별 규제개혁지수를 연차별로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규제개혁에 따른 산업경제적 정책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정책적 제언과 함께 본 연구를 제한점을 논의하기로 한다.

Ⅱ. 이론적 접근

1. 규제개혁 효과 분석을 위한 접근 방법

규제비용 및 규제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한 기존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 규제개혁의 효과 분석을 위한 접근 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방법은 미시적 효과분석으로서 규제에 따른 일차적인 비용부담을 측정하는 형태이다. 흔히 규제비용을 시산(calculation) 함으로써 해당 규제가 없어진 규제개혁의 성과를 추정하는 방식이며,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이나 벤치마킹(benchmarking) 등을 활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우선 비용편익분석은 각각의 개별 규제에 대해 규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추산하여 각 범주별로 합산함으로써 규제개혁의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이며(이종한 외, 2006), 대표적으로 하병기 외(2000)의 연구에서는 1998년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의·확정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른 총 324건에 대한 규제개혁의 편익을 고용 증대, 국민부담 경감, 정부비용 절감,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등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이종한 외(2006)의 연구에서도 노무현 정부에서 규제개혁기획단이 추진한 전략과제 가운데 정량적으로 시산 가능하고 시산을 위한 통계자료가 확보된 76개 세부 과제에 대해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규제개혁에 따른 비용절감의 순효과가 총 2조원을 넘어서는 것으

로 분석하고 있다. 다수의 이질적인 과제를 포함하는 규제개혁의 특성상 개별 규제에 대한 명확하고 정량적인 비용편익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러한 비용편익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규제개혁의 효과를 추정하고 있다(Parent and Prescott, 1999; Crain and Hopkins, 2001; Nicoletti et al., 2001; Alesina et al., 2003; Loayzar et al., 2004; Djankov et al., 2006; Dawson and Seater, 2013; Crew, 2014). 물론 주관적인 가정 및 추정에 근거함으로 인해 정확성이 떨어지고 금전 등으로 정량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하병기 외, 2000). 이러한 점에서 벤치마킹의 방법은 다른 국가나 산업 부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료가 부족하거나 가정이 불확실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으로 이해된다. 대표적으로 OECD(1997)의 연구에서는 전기, 항공, 도로교통, 통신, 물류 등 핵심 5개 산업에 대해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의 5개 국가의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를 벤치마킹 방법을 통해 추정하고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거시적 효과분석으로 개별 과제나 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의 효과를 바탕으로 국가산업경제에 걸친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적 모델링을 바탕으로 산업 간 연계를 통한 규제개혁의 파급효과를 추정하고 있으며, 투입산출모형(input-output model)이라고 불리는 산업연관분석이나 거시경제모형(macroeconomic model)을 이용한 일반균형분석, 일반균형연산모형(calcul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한 분석 등이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하병기 외(2000)의 연구에서는 앞서 미시적 분석을 통해 파악한 규제개혁의 산업별 효과를 바탕으로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전체 국가경제의 가격, 생산, 고용 및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으며, 거시경제모형을 통해 규제개혁 이후 10년 간의 거시경제적 효과의 변화와 관련해 실질 GDP가 8.5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임동순·조창현·김대욱(2005)의 연구는 2001-2003년 중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부담금 폐지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일반균형방식에 의한 다단계 최적화 모형을 통해 추정하였으며, 순 간접세의 감소에서 파급되는 물가수준의 완화 등을 추정하여 결과적으로 총 산출액이 6,145억원 증가하고 고용이 7,263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거시적 효과 분석은 규제개혁이 해당 산업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파급효과를 통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경제학적 가정과 모형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치의 편차가 연구자에 따라 크게 나타날 수 있으며, 규제개혁의 효과를 과도하게 확대시킬 우려도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통계적 회귀분석에 의한 효과분석 방법이다. 앞선 두 가지 방법은 규제개혁의 효과발생 범위에 따라 차별화되고 있으나 개별 규제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파악하여 주로 사전적인 효과분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통계적 회귀분석은 규제지수 등을 통해 포괄적인 규제정도를 파악하여 주로 사후적인 효과분석을 의도한다는 점에서 앞선 두 가지 방법과 차별화될 수 있다. 규제개혁 시점으로 기준으로 한 단절적 시계열 분석을 활용하거나 규제지수 등을 통해 시계열 분석 방법을 활용한 연구들을 살펴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Nicoletti and Scarpetta (2003)은 지난 20여년 간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규제 및 민영화 지수와 진입 자유화 지수 등을 설명변수로 하여 국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규제개혁의 효과가 생산성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긴축적인 고용보호규제가 오히려 고용률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하였다. Crain and Crain (2014)의 경우에도 1998년 OECD의 PMR (Product Market Regulation) 규제지수를 이용하여 1인당 GDP에 대한 규제수준의 영향을 통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규제지수 1단위의 증가가 1인당 GDP를 1,343달러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londal and Pilat (1997)의 연구에서는 개별 산업 부문에 대한 대규모 규제개혁 이전과 이후의 시계열적 비교를 통해 규제개혁이 해당 산업의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을 각각 0.5%p 개선시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동원·김선빈·박준 (2008)의 연구에서도 PMR 규제지수를 활용하여 국제간 비교연구를 통해 규제지수가 1단위 하락할 때 1인당 GDP가 951달러 증가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한국적 상황에서 시장경쟁 제한에 따른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2006년 기준 규제비용을 65조원으로 산출하였다. 이영범·지현정 (2008)의 연구에서는 OECD의 규제지수 설문조사(regulatory indicator questionnaire)를 활용하여 각국의 규제정도와 생산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규제개혁의 정도가 클수록 생산성 증가의 폭이 큰 것으로 분석하였다. 최진욱 (2006)의 연구에서도 OECD 규제지수를 활용하여 규제정도와 국가경쟁력간의 통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규제개혁 수준이 1단위 증가할 때 국가경쟁력 지수가 8.36점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통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한 규제개혁의 효과분석은 개별 규제에 대한 특별한 시산이 요구되지 않으며 기존에 현실화된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성과변수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그러나 개별 규제의 차별적 특성이 고려되기 어렵고 규제개혁의 설명변수로서 적합성을 갖춘 규제지수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2. 규제지수 작성 현황 및 평가

일반적으로 규제지수(regulation indicators)는 해당 국가나 산업별로 정부의 개입 및 산업의 자유도를 파악하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규제정도와 경제적 효과 간의 관계를 측정하는 수단으로서 더 큰 의미를 지닌다(이종한, 2013).

규제지수의 작성은 시기별로 혹은 개별 국가나 산업별로 규제정도의 변화를 일관되게 측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선 국가 단위의 규제지수로서 OECD의 규제관리체계 지수(RMS Indicators), 생산물시장 규제지수(PMR Indicators), 비제조업종 규제지수(NMR Indicators)와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Indicators 및 거버넌스 지수 중 규제품질지수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PMR 지수는 OECD 규제지수설문을 주로 활용하며, 국가통제(state control)와 기업 활동장벽(barriers to entrepreneurship), 무역과 투자장벽(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의 세 가지 하위 영역에 대해 국가별 규제체계 및 규제정책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세부항목들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구성된다(Koseke et al., 2015). PMR 지수를 포함해 국제적 규제수준에 대한 비교를 목적으로 다양한 지수들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제적인 규제지수를 설명변수로 한 규제 개혁의 성과분석 연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 규제수준의 비교를 위한 규제지수는 일국 차원의 규제품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각국의 규제제도 품질 비교에는 유용하지만 일국 차원의 규제정책의 경제적 성과측정에는 한계가 제기된다(이종한, 2013). 또한 대부분의 규제지수가 규제체계를 포함해 종합적인 국가의 규제수준을 정량적으로 지수화하는 과정에서 규제 강도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규제개혁의 성과측정 수단으로서 이와 같은 규제지수의 활용 가능성은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국가 단위의 규제지수가 갖는 한계점으로 인해 개별 국가 내에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규제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산업별 규제지수의 개발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등록규제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강도의 계량화를 위한 산업별 규제지수 연구가 전제되어야 규제강도에 따른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이종한, 2013). 대표적으로 Al-Ubaydli and McLaughlin(2015)의 연구는 1997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의 연방규제집(Code of Federal Regulation)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각 산업별 규제수준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으며, 규제데이터베이스의 관점에서 산업별 규제지수를 개발

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연방규제집을 활용한 규제관련 데이터베이스와 산업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하여 각 산업별 규제규모에 대한 1997년부터 2012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구성하였으며, 이렇게 생성된 규제지수(RegData)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Al-Ubaydli and McLaughlin(2015)의 연구는 등록규제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미국적 상황에서 산업 및 시기별로 양적 규제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양적 규제수준과 주요 경제적 변수 간의 관계를 통해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키워드 검색 방법에 따른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규제의 내용적 수준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은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규제등록을 통해 정부규제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규제의 양적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규제지수 작성의 필요는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일관되지 못한 규제등록 단위 설정 및 규제강도에 대한 미고려, 그리고 정부부처 단위의 규제등록에 따른 산업별 규제강도 파악의 한계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며, 이러한 배경에서 이종한(2013)의 연구는 등록규제 시스템을 활용하여 산업별 규제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경제적 성과지표에 대한 규제지수의 영향정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l-Ubaydli and McLaughlin(2015)의 연구에 근거하여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산업별 키워드 검색을 실시하여 각 법령의 산업관련도를 산정하였다. 이와 함께 규제의 강도를 가중치로 반영하여 각 산업별 규제지수를 산정하고 있다. 이종한(2013)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규제등록건수의 변화 등을 활용하여 규제정도를 측정하던 기존 방식에 비해 산업별 규제지수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측정을 위한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개별 규제의 산업관련도를 규제의 근거법령의 산업관련도로 치환하여 분석하는 등의 미시적인 방법론 상의 문제점과 함께 등록규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연차별 규제지수의 산정에 대한 타당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와 함께 안상훈(2007)의 연구는 진입규제와 관련한 산업별 진입규제지수를 통해 규제개혁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있으며, 진입규제지수를 사업체수와 생산액의 기준으로 나누어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 분야의 23개 중분류산업에 속하는 세세분류산업의 총수에서 진입규제가 존재하는 세세분류산업 총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진입규제지수가 산업별 진입률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사업체수 기준으로 진입규제지수에 대한 회귀계수가 -0.043으로 나타나 진입규제지수가 1단위 높아질 때 진입률은 4.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존속 규제가 아닌 규제의 완화를 대상으로 하여 규제지수를 작성한 사례도 살펴볼 수 있으며, 이종한(2007)의 연구는 통신산업 부문에 한정하여 규제완화지표를 산정하고 이를 통신소비자물가지수의 변화에 대한 설명변수로 포함하여 규제완화에 따른 물가지수의 감소를 통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측정하였다. 1997년 이후 통신산업을 대상으로 신설·강화·완화된 17개 규제들에 대해 규제완화지표를 산정하고 있으며, 본 규제의 강도와 규제완화 정도를 결합하여 지표값을 산정하였으나, 다소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형태이다.

Ⅲ. 실증분석

1. 연구 방법론 및 가설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미시적 혹은 거시적 방법의 경우 개별 규제개혁 과제의 금전적 편익에 대한 시산을 통해 분석의 엄밀성을 높이고 있으나, 포괄적인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기에는 범위의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주로 향후 예상되는 규제개혁의 효과를 사전적으로 추정한다는 점에서 실제 규제개혁의 효과라기보다는 기대효과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규제지수와 같이 포괄적 지표를 활용해 사후적으로 규제개혁 활동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발생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통계적 회귀분석 방법이 본 연구의 목적에 보다 부합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규제지수는 국가별 비교 차원에서 총량적인 규제의 규모보다는 규제체계 및 정부의 개입정도 등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직접적인 규제개혁 활동의 산출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물론 우리의 경우 규제등록시스템을 통해 현행 규제의 총량적 규모를 관리하고 있으나, 일관되지 못한 등록규제의 단위 문제와 함께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으며 등록규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력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등록규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실제 규제개혁 활동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는 산업별 규제개혁지수를 작성하여 각 산업별 규제개혁지수의 변화와 함께 산업경제적 성과변수들의 회귀적 통계분석을 통해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규제개혁지수의 작성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

할 수 있다.

우선 분석대상 기간은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을 설정하였으며, 일반적으로 규제개혁이 각 정부 단위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집권 기간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정치적 지향이 다소 상반되는 두 시기를 포함함으로써 규제개혁에 대한 정권별 특성을 통제하여 일반적인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대상이 되는 규제개혁 과제의 선정은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간되는 ‘규제개혁백서’에 보고된 규제개혁 과제들을 목록으로 정리하였다. 규제개혁백서를 통해 보고되었으나 정책자금 지원 등 규제개혁 과제로 분류하기 힘든 과제들을 제외하고 전체 10년의 기간 동안 총 1,862건의 규제의 폐지 및 완화를 포함한 규제개혁 과제들을 일차적으로 정리하였다. 한편 규제개혁 과제 외에도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동일 기간 동안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 규제 안건들을 정리하여 총 1,234건의 규제신설강화 과제들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들 가운데 국가산업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가구 등록 등 일부 과제들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296개의 대상과제를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이들 대상과제에 대한 가중치 설정이 필요하다. 앞서 정리된 2,296개의 대상과제는 정부나 연구자의 임의적 판단에 의해 단위과제로 설정되었으며, 각 단위과제 간의 규제 내용의 차이로 인해 총량적인 규제개혁의 규모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 규제개혁지수를 작성하고자 하였으며, 각 산업별로 대상 규제개혁과제가 갖는 규제부담의 정도를 고려한 가중치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우선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 중 72개의 중분류(two-digit level) 산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대상과제를 매칭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복수의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이를 구분하여 중복적으로 매칭하였다. 이와 함께 중복적 매칭 수준을 넘어 일반적인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들과 일반적인 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분하여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가중치는 산업별로 매칭된 규제개혁 대상과제의 내용을 파악하여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범위와 규제의 비용부담 정도를 반영하는 규제강도의 곱을 통해 이루어졌다.¹⁾ 규제의 대상범위는 해당

1) 이종한(2013)의 연구에서는 규제지수 작성을 위한 가중치 적용 과정에서 규제성격과 관련해 경제적/사회적/행정적 규제의 구분, 진입/가격/거래/품질/투입규제의 구분, 규제유형과 관련해 허가/검사/지도단속/신고 규제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적인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규제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에서 규제비용의 산정이 피규제대상집단

산업 내 전체 사업체 가운데 예상되는 피규제대상집단의 비율을 1에서 10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규제강도는 개별 피규제대상에 부가되는 규제비용부담을 고려하여 1에서 10점 척도로 평가함으로써 개별 대상과제에 따라 1에서 100까지의 가중치가 차등적으로 부여될 수 있게 설정하였다. 규제강도의 평가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규제의 일반적 제제 방식에 따라 평점부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최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대상과제의 특성에 따른 차별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표 1〉 규제개혁지수 작성을 위한 평가 가중치 가이드라인

		제한행위 강도		
		신고/보고 등	검사/시험/ 감독/기준설정 등	허가/면허/ 특허/금지 등
제한행위 대상유형	시장진입/가격책정	3-5	5-7	8-10
	품질관리	2-4	4-6	7-9
	일상영업/거래활동	1-3	3-5	6-8

대상과제에 대한 가중치 적용의 엄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로 35명의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대상과제들에 대한 대상범위와 규제강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이와 함께 연구진의 평가를 병행하여 내용적 전문성과 함께 평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²⁾ 이러한 작업을 통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총 10년에 걸쳐 72개 개별 산업과 제조업 일반, 전 산업 일반에 대한 두 개 부문을 포함하여 74개 산업 부문에 대한 740개의 패널데이터를 작성함으로써 규제개혁지수를 활용한 규제개혁의 산업경제적 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규제개혁의 산업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산업경제적 효과 변수로서 비용 절감과 투자 확대, 고용 증대 등을 직접적인 규제개혁의 효과를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표들이 생산성 및 가격, 생산규모, 고용규모 등에 영향을 미쳐 최종적으로 실질 GDP 및 산업생산지수 등 거시경제의 산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의 규모와 개별 피규제대상에 발생하는 규제비용의 곱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착안하여 규제의 대상범위와 규제강도를 일차적인 가중치로 적용하였으며, 규제강도의 적용과 관련해 선행연구들에서 적용된 규제성격 및 규제유형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였다.

- 2) 광범위한 규제영역으로 인해 개별 규제에 대한 직접적인 전문가보다는 규제정책 및 규제비용분석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풀을 구성하였으며, 가중치 산정을 위한 개별 규제개혁과제의 평가과정에서 유사 산업별로 해당과제를 배분함으로써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로 효과분석의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OECD, 1997; 하병기 외, 2000; 이종한 외, 2006; 안상훈, 2007; 이종한, 2013). 본 연구에서도 기존 연구의 분석 모형을 반영하여 규제개혁지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산업경제적 효과 변수들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규제개혁의 산업경제적 효과 발생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적 이슈에 대한 가설 검증을 시도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이 본 연구의 가설을 정리할 수 있다.

가설 1. 정부규제의 폐지 및 완화는 산업경제적 성과변수들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가설 2. 정부규제의 폐지 및 완화는 상대적으로 기존 사업체에 대한 수익성 증대에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가설 3. 상대적으로 개별 산업 부문에 대한 정부규제의 폐지 및 완화가 전 산업 일반에 대한 정부규제의 폐지 및 완화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가설 4. 정부규제의 폐지 및 완화는 상대적으로 단기나 장기보다는 중기에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가설 5. 상대적으로 누적된 정부규제의 폐지 및 완화가 일시적인 정부규제의 폐지 및 완화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가설 6. 상대적으로 신설 및 강화규제를 제외한 순 정부규제의 폐지 및 완화규모가 클수록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가설 1은 본 연구의 핵심 가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전의 연구들과 같이 규제개혁의 효과가 실제로 산업경제적인 변수들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더 좋은 제도가 더 나은 성과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일 것이나, 과거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규제개혁이 더 좋은 제도를 만들어 내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더구나 정책집행 상의 문제들을 감안할 때 실제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규제개혁이 기대효과만큼 충분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책평가의 차원에서 실증적 분석이 요구된다.

가설 2는 규제개혁에 따른 산업경제적 효과의 내용과 관련한 부분이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규제개혁 효과의 파급경로를 통해 변수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산업경제적 효과 변수를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차별적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시장진입 증가를 포함한 산업 생태계 확대, 개별 사업체의

규모 확대, 개별 사업체의 생산성 증대, 개별 사업체의 수익성 증대의 네 가지 측면에서 규제개혁의 산업경제적 효과를 살펴본다. 산업 생태계 확대와 관련해 신규 진입 증가를 통해 예상되는 산업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의 증가를 분석하며, 사업체 규모 확대와 관련해 개별 사업체의 총자산, 자본금, 매출액 규모 등의 변화를 분석한다. 사업체의 생산성 증대와 관련해 자본생산성 및 부가가치율의 변수를 포함하며, 수익성 증대와 관련해 매출액영업이익률 및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의 변수를 분석한다.³⁾ 규제개혁의 산업경제적 효과와 관련해, 일반적으로는 시장진입의 완화 등을 통해 신규 진입을 확대하여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격 인하를 통해 수요 진작과 매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Stigler나 Peltzman의 규제생성에 대한 이익집단정치(interest group politics) 모형을 적용한다면 잠재적 진입자보다는 기존 사업체의 이익증대를 위해 규제개혁 역시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지대 추구(rent-seeking)의 관점에서 다른 여타 변수에 비해 기존 사업체의 수익성 증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가설 3은 규제개혁의 범위와 관련한 부분이다. 규제개혁 대상과제들을 살펴보면 개별 산업 부문의 상당히 지엽적인 내용에서부터 전 산업에 걸쳐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보편적인 내용까지 다양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Wilson의 모형에서와 같이 피규제 집단의 범위가 제한될수록 규제생성이 효과적이듯이 규제개혁 역시 제한된 피규제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보다 정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전 산업 일반에 걸친 규제개혁 과제에 비해 개별 산업 부문에 한정된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효과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 4는 규제개혁의 효과가 발현되는 시점에 관한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3년 이내를 단기, 5년 이내를 중기, 5년 이상을 장기로 구분할 때, 규제개혁을 통한 제도변화의 효과가 산업경제적 변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회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대로 규제개혁을 하나의 외생적 충격으로 이해한다면 일정 시점 이후 충격에 따른 효과의 상쇄 및 완화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극단적으로는 기대심리에 기초하여 규제개혁이 법제화되기 전에 효과가 나타나고 막상 법제화된 경우에는 큰 변화를 발생하지 않는 초단기적 효과도 가능하다.

3) 자료의 출처와 관련해 사업체 규모와 종사자 규모는 통계청의 연도별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체 규모 및 수익성, 생산성 지표들은 한국은행의 연도별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활용하였다. 모든 자료는 물가변동 수준을 반영하여 2010년도 고정가격으로 처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규제개혁이라고 하는 제도 변화에 대한 적응기간 및 효과 발생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중기에 가장 큰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가설 5는 규제개혁의 일관성과 관련한 부분이며, 규제개혁이라는 제도 변화에 대해 피규제집단이 얼마나 신뢰하고 행태를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지속적인 규제개혁의 정책적 시그널이 해당 산업 부문의 사업체들로 하여금 정책적 신뢰를 발생시키고 그에 따라 제도 변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설 6 역시 가설 5와 마찬가지로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일관성 및 신뢰의 부분이며, 규제폐지 및 완화의 규모와 함께 규제의 신설 및 강화 규모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고 있다. 규제개혁 역시 일종의 정부 개입이라고 간주한다면 규제신설 및 강화를 포함해 특정 산업에 대한 전체 정부 개입 규모 가운데 규제개혁의 비중이 클수록 규제개혁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규제개혁지수를 규제폐지완화 수준과 규제신설강화 수준을 각각 포함한 분석모형에 비해 규제폐지완화 및 규제신설강화를 합산한 전체 정부개입 수준과 이들의 차분을 통한 순 규제폐지완화 수준을 각각 포함한 분석모형에서 더욱 뚜렷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음은 앞서 제시한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한 본 연구의 회귀모형식이다.

$$Y_{it_{it}} = \alpha + \beta_1 Y_{it-1} + \beta_2 Dereg_{it_{it}} + \beta_3 Reg_{it_{it}} + \beta_4 DeregAll_{it_{it}} + \beta_5 RegAll_t \\ + \beta_6 (DeregMf_t * Mf_i) + \beta_7 (RegMf_t * Mf_i) + \beta_8 I_i + \beta_9 T_t + \epsilon_{it_{it}}$$

$Y_{it_{it}}$: i 산업의 t 시점에서의 규제개혁의 산업경제적 효과 지표

$Dereg_{it_{it}}$: i 산업의 t 시점에서의 규제폐지 및 완화수준

Reg_{it} : i 산업의 t 시점에서의 규제신설 및 강화 수준

$DeregAll_{it_t}$: t 시점에서 전 산업 일반에 대한 규제폐지 및 완화수준

$RegAll_t$: t 시점에서 전 산업 일반에 대한 규제신설 및 강화 수준

$DeregMf_{it_t}$: t 시점에서 제조업 일반에 대한 규제폐지 및 완화수준

$RegMf_t$: t 시점에서 제조업 일반에 대한 규제신설 및 강화 수준

Mf_i : i 산업의 제조업 포함 여부

I_i : i 산업의 산업별 특성

T_t : t 시점에서의 연도별 특성

개별 산업과 전 산업 일반, 그리고 제조업 일반에 대한 규제개혁지수로서 규제폐지 및 완화수준과 규제신설 및 강화 수준이 함께 포함되고 있으며, 패널데이터의 산업별 특성과 연도별 특성을 반영하여 이원고정효과모형 (two-way fixed effect model) 을 적용하였다.⁴⁾ 규제개혁지수를 통해 규제폐지완화 및 규제신설강화 수준을 입력함에 있어서도 지수의 누적 여부 및 종속변수의 측정 시점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다양한 회귀모형을 구성하였으며, 규제폐지완화 및 규제신설강화의 변수를 각각 입력하는 방식과 함께 두 변수의 합산과 차분을 입력하여 순 규제폐지완화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모형도 함께 구성되었다.

〈표 2〉 규제개혁 효과분석을 위한 회귀모형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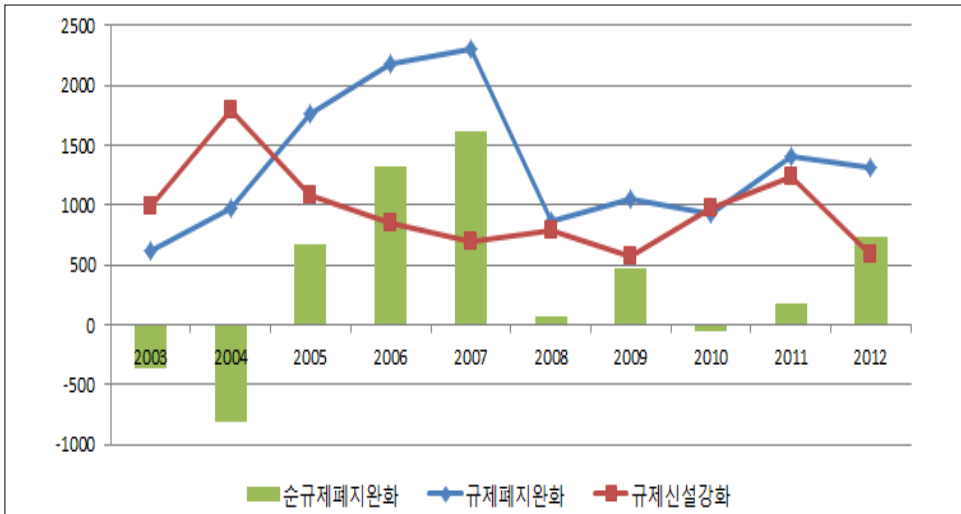
			종속변수 측정시점			
			동일시점	1년 이후	3년 이후	5년 이후
독립변수 측정방법 및 측정시점	규제폐지완화 및 규제신설강화	1년 누적치	모형 A-1 (사전효과)	모형 A-2 (단기)	모형 A-3 (단기)	모형 A-4 (중기)
		3년 누적치	-	모형 A-5 (단기)	모형 A-6 (중기)	-
		5년 누적치	-	모형 A-7 (중기)	-	모형 A-8 (장기)
	전체 정부개입 및 순 규제폐지완화	1년 누적치	모형 B-1 (사전효과)	모형 B-2 (단기)	모형 B-3 (단기)	모형 B-4 (중기)
		3년 누적치	-	모형 B-5 (단기)	모형 B-6 (중기)	-
		5년 누적치	-	모형 B-7 (중기)	-	모형 B-8 (장기)

2. 분석 결과

본 연구를 통해 작성된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산업별 규제개혁지수는 부록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지수의 연도별 변화추이는 다음의 그림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4) 단년도 규제개혁과 달리 누적적 규제개혁에 대한 회귀모형에서는 독립성의 가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전년도 효과수준에 대한 통제변수가 제외되었다.

〈그림 1〉 규제개혁지수의 연도별 변화추이



규제폐지완화 수준은 각 정권을 기준으로 정권 후반부로 갈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각 정권단위로 정권 초반에 논의된 규제개혁 과제가 정권 후반부로 가면서 입법화되는 시차적 모습을 나타낸다고 해석된다. 흥미로운 점은 전반부의 노무현 정부에서는 규제신설강화 수준이 초기에 상대적으로 높다가 2005년부터 규제폐지완화 수준이 이를 넘어서고 있으며, 그 폭도 후반부의 이명박 정부에 비해 큰 편이다. 이전 정부나 이후 정부에 비해 노무현 정부에서의 규제개혁이 미약했다는 지적과 달리, 집권 후반기에 이루어진 규제개혁의 성과 수준이 그리 작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표 3〉 유형별 규제개혁지수 평균값

		단년도 (10년 평균)	3년 누적치 (8년 평균)	5년 누적치 (6년 평균)
개별 산업 부문 (70개 산업 평균)	신설강화	13.59 (23.65)	40.44 (58.00)	64.79 (86.65)
	폐지완화	18.31 (38.71)	57.66 (93.32)	97.76 (137.94)
제조업 일반 (18개 산업 포함)	신설강화	17.89 (14.87)	47.25 (26.53)	68.33 (22.47)
	폐지완화	78.89 (49.16)	245.38 (99.23)	458.67 (54.17)
전 산업 일반 (70개 산업 포함)	신설강화	81.00 (73.69)	173.38 (80.70)	332.50 (127.61)
	폐지완화	95.00 (79.69)	326.13 (156.24)	568.33 (147.41)

한편 본 연구에서는 규제개혁의 대상범위와 누적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분석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다음의 표에서는 개별 산업 부문과 제조업 일반, 전 산업 일반에 대해 단년도, 3년 누적치, 5년 누적치에 대한 규제개혁지수 값을 살펴보고 있다.

〈표 4〉 사업체 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단위: 개)

단년도 규제개혁 효과				누적적 규제개혁 효과				
				3년 누적치		5년 누적치		
규제폐지완화								
	모형 A-1: 동일연도	모형 A-2: 1년 후	모형 A-3: 3년 후	모형 A-4: 5년 후	모형 A-5: 1년 후	모형 A-6: 3년 후	모형 A-7: 3년 후	모형 A-8: 5년 후
개별 산업	4.6256 (3.7450)	-1.5438 (3.7959)	-1.5749 (3.4770)	-2.1683 (2.4254)	-4.0897 (3.8600)	-13.4841 (5.1131)***	-16.0325 (5.9543)***	-17.3730 (8.9250)*
제조업 일반	-2.4662 (5.4312)	4.5485 (5.5128)	-3.6892 (5.6206)	4.1147 (4.5091)	16.8986 (11.1679)	-5.5744 (14.5236)	-58.4209 (28.7461)**	-29.3327 (52.4175)
전산업 일반	35.4056 (13.1717)**	-2.9868 (13.2324)	26.9802 (11.9702)**	3.2793 (2.8620)	180.9253 (59.4713)***	-542.5073 (314.9224)*	-9.6331 (4.1307)**	57.6864 (39.6448)
순 규제폐지완화								
	모형 B-1: 동일연도	모형 B-2: 1년 후	모형 B-3: 3년 후	모형 B-4: 5년 후	모형 B-5: 1년 후	모형 B-6: 3년 후	모형 B-7: 3년 후	모형 B-8: 5년 후
개별 산업	1.7659 (3.8377)	0.4114 (3.8702)	-2.7444 (3.7414)	1.2560 (2.5058)	2.7500 (3.9686)	-4.3284 (5.2026)	-5.2806 (6.3020)	-12.0528 (8.3314)
제조업 일반	-0.0125 (7.7337)	-6.5031 (8.2298)	-0.9484 (6.9140)	-5.2905 (6.3316)	-21.6137 (15.8680)	-13.2091 (19.4162)	10.9498 (19.1606)	-33.4063 (90.0021)
전산업 일반	19.8610 (8.3602)**	-6.0923 (8.4437)	8.1936 (5.2350)	6.6842 (1.6812)***	-21.6137 (15.8680)	-138.7976 (63.2120)**	-5.6009 (11.5235)	27.1208 (14.7553)*

주: *, $p < 0.1$, **, $p < 0.05$, ***, $p < 0.01$, 괄호안은 표준편차.

작성된 규제개혁지수를 바탕으로 산업경제적 효과변수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자. 먼저 신규 진입을 포함한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와 관련해 산업별 사업체수와 규제개혁지수 간의 관계를 다음의 〈표 4〉에서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모형 A-1에서 A-8까지는 규제폐지완화와 규제신설강화의 수준을 각각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단년도 규제개혁의 효과는 전 산업 일반에 대한 규제폐지완화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규제폐지완화의 누적치를 포함한 분석에서도 전 산업 일반에 대한 규제폐지완화가 이루어진 1년 후 단기적으로만 사업체 수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개별 산업에 대한 규제폐지완화는 중장기적

으로 해당 산업 부문의 사업체 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정부 개입 수준과 순 규제폐지완화의 변수를 포함한 모형 B-1에서 B-8까지의 분석 결과에서도 개별 산업 보다는 전 산업 일반에 대해 상대적으로 단기 시점에서 한정적으로 사업체 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규제개혁을 통해 시장진입이 확대되고 해당 산업 부문의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에 비해 큰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개별 산업의 사업체 수 감소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개별 사업체의 수준에서 사업체의 규모에 대한 규제개혁의 효과를 살펴본다. <표 5>는 개별 사업체의 총매출액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제조업 일반이나 전 산업 일반에 비해 개별 산업에 대한 규제개혁 효과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모형 A-5와 B-2에서와 같이 규제폐지완화 1년 후에 총매출액의 증가를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3년 이후부터는 오히려 총매출액 규모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어 매출액 증가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오히려 누적적으로 지속된 규제폐지완화가 해당 산업 내 사업체의 매출액 규모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일반적인 규제개혁의 기대효과와 상치되고 있는 부분이다.

<표 5> 총매출액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단위: 십억 원)

단년도 규제개혁 효과					누적적 규제개혁 효과			
					3년 누적치		5년 누적치	
규제폐지완화								
	모형 A-1: 동일연도	모형 A-2: 1년 후	모형 A-3: 3년 후	모형 A-4: 5년 후	모형 A-5: 1년 후	모형 A-6: 3년 후	모형 A-7: 3년 후	모형 A-8: 5년 후
개별 산업	8.1830 (15.8607)	8.7026 (14.4731)	-1.5432 (13.8268)	-25.6780 (13.8767)*	21.9159 (11.5859)*	-21.4216 (10.6532)**	-22.7462 (7.6843)**	-22.6535 (12.7539)*
제조업 일반	0.3708 (17.4220)	0.4146 (15.7680)	26.7287 (17.5266)	-48.4007 (23.8922)**	-8.6882 (31.2845)	19.5292 (29.9802)	-34.4658 (38.8994)	-116.7828 (77.8869)
전산업 일반	11.3871 (44.4728)	-48.5454 (39.4705)	6.2331 (41.7481)	9.0676 (15.3128)	82.3382 (173.4752)	-819.5365 (708.5040)	2.2618 (5.8769)	46.0080 (66.7957)
순 규제폐지완화								
	모형 B-1: 동일연도	모형 B-2: 1년 후	모형 B-3: 3년 후	모형 B-4: 5년 후	모형 B-5: 1년 후	모형 B-6: 3년 후	모형 B-7: 3년 후	모형 B-8: 5년 후
개별 산업	6.8836 (15.9473)	34.1460 (14.6377)**	0.2309 (16.1790)	5.7481 (15.1302)	23.4433 (14.7187)	9.0625 (12.5918)	-3.8613 (9.3652)	-24.5747 (14.7082)*
제조업 일반	-36.3577 (24.5974)	21.5323 (23.9685)	38.8945 (24.8942)	34.4770 (35.9455)	1.3925 (54.9130)	34.3888 (41.1813)	24.8719 (25.8833)	36.9586 (57.0984)
전산업 일반	8.7979 (27.4990)	-53.6579 (24.7107)**	-10.4128 (17.8872)	8.3774 (9.3097)	-28.5612 (44.2265)	-197.6650 (141.3432)	-16.9938 (16.9632)	21.3678 (24.8726)

주: *, $p < 0.1$, **, $p < 0.05$, ***, $p < 0.01$, 괄호안은 표준편차.

〈표 6〉은 규제개혁에 따른 산업경제적 효과 중 생산성의 측면에서 개별 사업체의 부가가치율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생산성 측면에서 규제폐지완화에 따른 큰 변화를 확인할 수는 없으며, 그 방향성도 다소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다만 개별 산업에 대한 누적적인 규제폐지완화가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은 규제개혁에 따른 기업 생산성의 증대 가설을 일부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표 6〉 부가가치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단위: %)

단년도 규제개혁 효과					누적적 규제개혁 효과			
					3년 누적치		5년 누적치	
규제폐지완화								
	모형 A-1: 동일연도	모형 A-2: 1년 후	모형 A-3: 3년 후	모형 A-4: 5년 후	모형 A-5: 1년 후	모형 A-6: 3년 후	모형 A-7: 3년 후	모형 A-8: 5년 후
개별 산업	0.0088 (0.0052) *	-0.0044 (0.0049)	0.0056 (0.0045)	-0.0106 (0.0041) ***	0.0020 (0.0025)	-0.0007 (0.0024)	-0.0037 (0.0028)	0.0075 (0.0063)
제조업 일반	0.0083 (0.0057)	0.0012 (0.0054)	-0.0070 (0.0057)	0.0120 (0.0070) *	0.0052 (0.0068)	-0.0080 (0.0068)	0.0057 (0.0140)	0.0428 (0.0385)
전산업 일반	-0.0184 (0.0142)	0.0114 (0.0133)	0.0134 (0.0137)	0.0016 (0.0045)	0.0047 (0.0377)	0.0681 (0.1604)	0.0006 (0.0021)	-0.0410 (0.0330)
순 규제폐지완화								
	모형 B-1: 동일연도	모형 B-2: 1년 후	모형 B-3: 3년 후	모형 B-4: 5년 후	모형 B-5: 1년 후	모형 B-6: 3년 후	모형 B-7: 3년 후	모형 B-8: 5년 후
개별 산업	0.0044 (0.0053)	-0.0095 (0.0050) *	0.0066 (0.0053)	-0.0045 (0.0044)	0.0078 (0.0032) **	0.0053 (0.0028) *	0.0031 (0.0034)	0.0115 (0.0073)
제조업 일반	0.0130 (0.0081)	0.0095 (0.0081)	-0.0070 (0.0082)	-0.0115 (0.0106)	-0.0099 (0.0119)	0.0100 (0.0093)	0.0045 (0.0093)	-0.0267 (0.0282)
전산업 일반	-0.0038 (0.0088)	-0.0006 (0.0083)	0.0080 (0.0058)	0.0032 (0.0028)	-0.0033 (0.0096)	-0.0016 (0.0320)	-0.0040 (0.0061)	-0.0156 (0.0123)

주: *, $p < 0.1$, **, $p < 0.05$, ***, $p < 0.01$, 괄호안은 표준편차.

마지막으로 개별 사업체의 수익성과 관련해, 〈표 7〉은 규제개혁지수의 변화에 따른 자기자본순이익률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규제폐지완화와 규제신설강화를 포함한 모형 A에 비해 전체 정부개입과 순 규제폐지완화를 포함한 모형 B에서 보다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개별 산업에 대한 순 규제폐지완화 수준이 클수록 단기적으로 개별 사업체의 수익성이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모형 B-7과 모형 B-8에서와 같이 중장기적인 시점에서는 오히려 수익성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할 수 있다.

〈표 7〉 자기자본순이익률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단위: %)

단년도 규제개혁 효과					누적적 규제개혁 효과			
					3년 누적치		5년 누적치	
규제폐지완화								
	모형 A-1: 동일연도	모형 A-2: 1년 후	모형 A-3: 3년 후	모형 A-4: 5년 후	모형 A-5: 1년 후	모형 A-6: 3년 후	모형 A-7: 3년 후	모형 A-8: 5년 후
개별 산업	0.0472 (0.0469)	-0.0337 (0.0499)	-0.0127 (0.0450)	-0.0548 (0.0452)	-0.0043 (0.0276)	-0.0230 (0.0275)	-0.0242 (0.0302)	-0.0366 (0.0628)
제조업 일반	-0.0112 (0.0516)	0.0063 (0.0543)	0.0307 (0.0571)	-0.0676 (0.0779)	0.0762 (0.0744)	-0.0206 (0.0773)	-0.1906 (0.1527)	-0.2379 (0.3833)
전산업 일반	-0.1507 (0.1282)	-0.1261 (0.1342)	0.0914 (0.1362)	0.0374 (0.0502)	-0.2614 (0.4128)	0.4780 (1.8259)	0.0262 (0.0231)	-0.1068 (0.3287)
순 규제폐지완화								
	모형 B-1: 동일연도	모형 B-2: 1년 후	모형 B-3: 3년 후	모형 B-4: 5년 후	모형 B-5: 1년 후	모형 B-6: 3년 후	모형 B-7: 3년 후	모형 B-8: 5년 후
개별 산업	-0.0067 (0.0473)	0.0128 (0.0503)	0.1329 (0.0529)**	-0.0807 (0.0494)	0.1254 (0.0350)***	0.0176 (0.0325)	-0.0655 (0.0368)*	-0.1966 (0.0724)***
제조업 일반	0.0280 (0.0730)	-0.0082 (0.0820)	0.1626 (0.0813)**	-0.0325 (0.1179)	-0.0691 (0.1307)	0.1216 (0.1061)	0.0637 (0.1016)	0.0305 (0.2810)
전산업 일반	-0.0816 (0.0790)	-0.1207 (0.0839)	-0.0172 (0.0583)	0.0321 (0.0304)	-0.0096 (0.1052)	-0.0624 (0.3643)	-0.0804 (0.0666)	-0.0263 (0.1224)

주: *, $p < 0.1$, **, $p < 0.05$, ***, $p < 0.01$, 괄호안은 표준편차.

다음의 〈표 8〉은 앞서 제시한 네 가지 효과 변수를 포함해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체 규모 확대, 사업체 생산성 증대, 사업체 수익성 증대와 관련한 다른 효과 변수들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⁵⁾ 본 연구를 통한 실증분석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와 관련해, 전 산업 일반에 대한 규제개혁에 따라 단기적으로 뚜렷한 사업체 수의 증가 효과를 확인할 수는 있으며, 시차를 두고 장기적으로는 종업원 수의 증가까지 가져오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개별 산업 부문이나 제조업 일반에 대한 규제개혁은 오히려 사업체 수의 감소나 종업원 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파악되며, 전 산업 일반에 대한 사업체 수 증가 효과도 중장기적으로는 역전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개별 산업 부문의 규제폐지 및 규제완화가 사업체 수의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는 부분은 진입장벽의 완화에 따른 신규진입 증가의 기대

5) 앞서 제시된 효과 변수 외에 다른 효과 변수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의 요약표는 부록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보다는 규제개혁 이후 기존 사업체 간의 전략적 합병 등과 같은 집중화의 가능성이 더 커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규제개혁 이후 나타나고 있는 종업원 수의 감소는 주로 산업안전 규제나 환경 규제의 완화 및 폐지에 따른 기존 인력의 절감 부분이 수치적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전 산업 일반에 대한 규제개혁 이후 장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업체 수의 감소와 종업원 수의 증가는 규제개혁 이후 소규모 신규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 개편과 달리 집중화된 거대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 개편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규제개혁의 성과는 개별 사업체의 규모와 관련해 총자산 및 자본금 규모에 있어 상당히 뚜렷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편이다. 특히 규제개혁 과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사전적 효과의 부분은 단순히 기업이 사후적으로 규제개혁 결과에 대응하기 보다는 규제개혁 과정에 참여하고 미래를 예상하여 규제개혁과 동시에 적극적인 사업체의 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 역시 중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사업체의 규모와 관련한 또 다른 변수로서 총매출액 규모 자체는 단기적으로 다소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나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효과가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가경제의 규모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정부 정책 기대에 비해서는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 사업체의 생산성과 관련해, 몇 가지 유의한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규제개혁의 효과를 일관되게 설명하기에는 다소 상반되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자본생산성과 부가가치율의 변수를 통해 살펴본 기업 생산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규제개혁에 따라 특정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편이다. 상대적으로 제조업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자본생산성과 부가가치율 모두 중장기적으로 뚜렷하지는 않지만 생산성의 증대와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 부문에 대한 규제개혁의 특수성을 살펴볼 수 있다.

넷째, 사업체의 수익성과 관련하여, 개별 산업 부문 및 제조업 일반에 대한 단기적인 규제개혁의 효과는 상당히 뚜렷하게 수익성의 개선을 가져오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선 생산성 증대와 달리 규제개혁의 효과가 장기적인 생산성 증대보다는 단기적인 수익성 증대에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전 산업 일반에 대한 규제폐지완화는 사업체의 수익성 개선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매출액영업이익률에 대한 부정적 효과는 규제개혁에 따른 효과라기보다는 규제폐지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게 되는 배경으로서 이해할 수

〈표 8〉 회귀분석 결과 종합표

	사전적 효과	단기 효과		중기 효과		장기 효과
		단년도	누적	단년도	누적	
사업체수	규제폐지완화					(-) (-) (-) (-)
	순 규제폐지완화					
	규제폐지완화					(-) (-)
	순 규제폐지완화					
	규제폐지완화	(+) (+)	(+) (+)	(+) (+) (+)	(-) (-)	(+) (+)
	순 규제폐지완화	(+) (+)		(+) (+) (+)	(-) (-)	(+) (+)
총사자수	규제폐지완화					
	순 규제폐지완화					(+)
	규제폐지완화	(-) (-)	(-) (-)			
	순 규제폐지완화					(+) (+)
	규제폐지완화	(-) (-)	(+)	(-) (-)	(-) (-) (-)	(+) (+)
	순 규제폐지완화	(-) (-)	(-)	(-) (-)	(-) (-) (-)	(+) (+) (+)
총자산	규제폐지완화					
	순 규제폐지완화					
	규제폐지완화	(+) (+)	(+)	(-) (-)	(+) (+)	
	순 규제폐지완화					
	규제폐지완화					
	순 규제폐지완화					
자본금	규제폐지완화					
	순 규제폐지완화					
	규제폐지완화	(+) (+)	(+)	(+) (+)	(-) (-)	(-) (-)
	순 규제폐지완화	(+) (+) (+)	(+)	(+) (+) (+)	(+) (+) (+)	(+) (+) (+)
	규제폐지완화					
	순 규제폐지완화					

	제조업 단위	규제폐지완화		(-) (-)	(-)
		순 규제폐지완화	(+) (+)		
	전체 산업 단위	규제폐지완화	(+) (+) (+)	(-) (-)	
		순 규제폐지완화	(-)		
	개별 산업 단위	규제폐지완화		(-) (-)	(-) (-)
		순 규제폐지완화	(+) (+)		(-)
	제조업 단위	규제폐지완화		(-) (-)	
		순 규제폐지완화			
총매출	전체 산업 단위	규제폐지완화			
		순 규제폐지완화	(-) (-)		
	개별 산업 단위	규제폐지완화			
		순 규제폐지완화			
자본생산성	제조업 단위	규제폐지완화		(+) (+)	
		순 규제폐지완화	(-) (-)		
	전체 산업 단위	규제폐지완화	(-) (-)	(-) (-)	(-) (-)
		순 규제폐지완화	(?)	(+) (+)	(-) (-)
부가가치율	개별 산업 단위	규제폐지완화	(+)	(-) (-) (-)	
		순 규제폐지완화		(+) (+)	(+)
	전체 산업 단위	규제폐지완화		(+)	
		순 규제폐지완화			

매출액영업이익률	개별 산업 단위	규제폐지완화			(-) (-)
		순 규제폐지완화		(+) (+) (+)	
	제조업 단위	규제폐지완화	(+)		(-)
		순 규제폐지완화		(+)	(-) (-) (-)
	전체 산업 단위	규제폐지완화	(-) (-) (-)	(-) (-)	
		순 규제폐지완화	(-) (-) (-)		
	개별 산업 단위	규제폐지완화		(-)	
		순 규제폐지완화		(+) (+) (+) (+) (+)	
	제조업 단위	규제폐지완화		(+)	
		순 규제폐지완화	(+)	(+)	
	전체 산업 단위	규제폐지완화			
		순 규제폐지완화			
총자산순이익률	개별 산업 단위	규제폐지완화			
		순 규제폐지완화		(+)	
	제조업 단위	규제폐지완화			
		순 규제폐지완화	(+)	(+)	
	전체 산업 단위	규제폐지완화			
		순 규제폐지완화			
	개별 산업 단위	규제폐지완화			
		순 규제폐지완화	(+)	(+)	(-) (-) (-)
	제조업 단위	규제폐지완화			
		순 규제폐지완화	(+)	(+)	
	전체 산업 단위	규제폐지완화			
		순 규제폐지완화			

주: a. (+) 나 (-) 표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회귀계수의 방향을 의미.
b. (+) 나 (-) 표시의 개수는 통계적 유의성의 강도를 의미, 예컨대 1개는 10%, 2개는 5%, 3개는 1%.
c. (?) 표시는 동일 항목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값이 상이한 방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

있는 부분이다. 한편으로는 사업체의 수익성 증대를 일종의 지대(rent)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개별 산업 부문이 아닌 전 산업 부문에 대한 규제개혁이 사업체의 수익성 증대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이익집단정치모형에 따르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제시한 본 연구의 가설들에 대한 검증결과를 다음의 <표 9>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매우 강력하고 뚜렷한 결과는 아니지만, 지난 10년 간 우리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은 우리 산업경제에 일정수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개별 산업 부문에 대한 규제개혁은 사업체의 수익성 및 규모 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효과의 발생시점과 관련해서는 주로 3년 이내의 단기적 시점에서의 기업경영개선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누적적으로 지속된 규제개혁 및 규제폐지완화의 비중이 높은 경우에 보다 일관된 규제개혁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규제개혁의 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과정의 일관성도 지적될 수 있다. 다만, 규제개혁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단기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부분은 규제개혁에 따른 중장기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국가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규제개혁을 선언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규제개혁이 추진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 과제 선정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더 요구되는 부분이다.

<표 9> 연구가설 검증 결과

항목	가설	검증	분석
규제개혁의 효과 여부	긍정적 효과가 큼	△	매우 강력한 긍정적 효과는 아님
효과의 내용	기존 사업체의 수익성 증대 효과가 큼	○	수익성 > 사업체 규모 증대 > 산업 규모 확대 > 생산성
규제개혁의 범위	개별 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의 효과가 큼	○	수익성과 사업체 규모와 관련해 개별 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의 효과가 큰 편 제한적으로 전 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은 사업체 규모에 효과 발생
효과발생의 시점	상대적으로 중기에 효과가 큼	X	대부분 3년 이내 단기 시점에서 효과 발생이 높은 편
규제개혁의 누적	상대적으로 누적적 규제개혁의 효과가 큼	△	일관되지는 않으나 누적적 규제개혁의 효과에 대한 유의성이 높은 편
규제개혁의 비중	순 규제개혁이 클수록 규제개혁의 효과가 큼	△	일관되지는 않으나 순 규제개혁의 효과에 대한 유의성이 높은 편

I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전 세계적으로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창조경제를 강조하는 시대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정책수단으로서 규제개혁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정책활동이 그러하듯 규제개혁 역시 예상되는 기대효과를 충실히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10년 간에 걸쳐 추진되어온 규제개혁 노력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규제개혁지수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경제적으로 규제폐지 및 규제완화에 따른 일정 수준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정부나 일반국민들이 기대한 것에 비해서는 그 효과 정도가 그리 강력하지 않으며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미흡한 수준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제개혁의 기대효과와 실제효과 간의 차이 발생에 대한 원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선 정부의 규제개혁 과제가 갖고 있는 질적 수준의 다양성이 그 첫 번째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규제개혁에 대한 원론적 입장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명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구체적인 규제개혁 추진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입장이 개입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기존 규제의 개선 및 완화라는 명목으로 기존 규제에 비해 훨씬 비용 부담이 큰 규제가 규제개혁 대상과제로 포함되거나, 혹은 무의미한 규제개혁 과제들이 단순히 과제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포함되기도 한다. 경제활성화라는 규제개혁의 정책목표는 너무도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오히려 경제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개혁 활동까지 대상과제에 포함될 우려도 있다.

규제개혁의 역설(deregulatory paradox)의 가능성도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실증분석 결과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규제의 역설(regulatory paradox)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규제개혁 활동 역시 의도되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산업경제적으로 발생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시장 진입장벽의 완화는 신규 소규모 기업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하고 이루어지지만 기업 합병의 확대로 인해 오히려 산업 내 기존 중소기업들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노동비용을 줄이기 위한 작업장 안전인력 기준의 완화가 오히려 노동효율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특히 규제개혁의 역설은 충분한 영향분석을 거치지 않고 규제개혁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규제의 역설에 비해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여지가 있다.⁶⁾

한편 규제개혁을 둘러싼 이익집단정치의 작용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규제생성

과 관련한 이익집단정치의 작용에서와 같이 규제개혁 역시 특정 이익집단의 편익을 확대하기 위해 이익집단정치의 산물로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특정 이익집단의 편익이 국가 산업경제적인 효과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규제개혁의 효과가 국가 산업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지 못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앞선 실증분석 결과에서 다른 어떤 효과 변수보다 기존 사업체의 수익성 지표의 단기적 개선 효과가 높게 나타난 부분을 통해 규제개혁을 둘러싼 이익집단정치의 작용을 고려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을 통해 누가 어떠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더욱 중요해지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 방법론의 한계점에서 기인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특히 정부 규제개혁의 총량적 규모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규제개혁지수를 새롭게 작성하여 이루어진 본 실증 분석은 규제개혁지수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로 인해 한계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개별 규제개혁 대상과제의 확인과 함께 가중치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시산의 방식이 아닌 전문가적 판단을 통한 평가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개별 규제개혁지수의 산정 자체의 엄밀성이 부족한 부분은 한계로 인정된다. 규제개혁지수 산정 과정에서 가중치 적용 방식 및 단위의 조정과 함께 고정효과모형 외에 추가적인 패널자료 분석방법의 적용을 통해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향후 작성된 규제개혁지수의 추가적인 타당성 검증과 함께 여타 산업경제적인 효과변수들과 연계해 규제개혁의 효과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1. 김영평 · 최병선 · 신도철, 『규제의 역설』, 삼성경제연구소, 2006.
 2. 김정해,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와 향후과제』, 한국행정연구원, 2007.
 3. 김주찬 · 이민창 · 이혁우,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 성과평가』, 전국경제인연합회, 2012.
-
- 6)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로 구분하여 적절치 못한 사회적 규제의 폐지나 완화가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부분도 규제의 역설로 이해된다. 그러나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를 엄격히 구분하여 규제개혁에 따른 산업경제적 효과를 예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학술적인 개념적 구분과 달리 실무적으로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에 대한 구분이 혼동되고 있으며, 규제의 유형 구분보다는 개별 규제개혁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이해가 규제의 역설을 완화하는데 더 큰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규제가 갖는 특성, 예컨대 대중적 관심이나 광범위한 피규제집단, 규제개혁 과정의 복잡성 등은 규제개혁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정적 요인으로서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4. 김태운 · 김주찬 · 양준석, 『규제개혁평가모형 및 규제개혁지수의 개발』, 한국행정연구원, 2004.
5.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의 경제규제비용 분석』, Issue Paper, 2008.
6. 안상훈, “진입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와 규제개혁의 정치경제학,” 『국가경제와 기업경영, 그리고 기업규제』, 2007 한국경제학회 · 한국경영학회 공동심포지엄, 2007.
7. 이동원 · 김선빈 · 박 준, 『한국의 경제규제비용 분석』, 삼성경제연구소, 2008.
8. 이영범 · 지현정, “정부규제와 생산성과의 관계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행정논총』, 제46권 제3호, 2008.
9. 이종환, 『규제개혁 효과분석을 위한 기본모형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7.
10. ———, 『규제성과의 측정 및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3.
11. 이종환 · 박형준 · 박순찬, 『전략과제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분석』, 국무조정실 학술연구용역, 2006.
12. 임동순 · 조창현 · 김대욱, 『규제개혁의 효과 분석 및 평가』, 산업연구원, 2005.
13. 최병선 · 이혁우, “한국 규제개혁시스템 혁신방안,” 『규제연구』, 제23권, 특별호, 2014.
14. 최진욱, “규제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중심으로,” 『규제연구』, 제15권 제1호, 2006.
15. 하병기 외, 『규제개혁의 경제효과 분석』, 산업연구원 21세기 준비총서(2), 을유문화사, 2000.
16. Al-Ubaydli, Omar and McLaughlin, Patrick A., “RegData: A Numerical Database on Industry-specific Regulations for all United States Industries and Federal Regulations, 1997-2012,” *Regulation & Governance*, doi: 10.1111/rego.12107, 2015.
17. Blöndal, S., and Pilat, D., “The Economic Benefits of Regulatory Reform,” *OECD Economic Studies*, 28, 1997, 7-48.
18. Coffey B., McLaughlin P. A., and Tollison, R. D., “Regulators and Redskins,” *Public Choice*, 153, 2012, 191-204.
19. Crain, W. M., and Crain, N. V., *Federal Regulation to the U.S. Economy, Manufacturing and Small Business*, 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2014.
20. Crews, C. W. Jr., *Ten Thousand Commandments: An Annual Snapshot of the Federal Regulatory State*, Competitive Enterprise Institute, 2014.
21. Dawson J. W., and Seater, J. J., “Federal Regulation and Aggregate Economic Growth,” *Journal of Economic Growth*, 18, 2013, 137-177.
22. Djankov, S, La Porta R, Lopez-de-Silanes, F., and Shleifer, A., “The Regulation Entr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7, 2002, 1-37.
23. Djankov, S., McLiesh, C., and Ramalho, R., “Regulation and Growth,” *Economic Letters*, 92, 2006, 395-401.
24. Greenston, M., “The Impact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on Industrial Activity: Evidence from the 1970 and 1977 Clean Air Act Amendments and the Census of Manufac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0, 2002, 1175-1219.
25. Hahn, R. W., and Hird, J. A., “The Costs and Benefits of Regulation: Review and Synthesis,” *Yale Journal of Regulation*, 8(1), 1991, 233-278.
26. Jain-Chandra, S., and Zhang, L., *How can Korea Boost Potential Output to Ensure Continued Income Convergence?* IMF Working Paper No.14/54, 2014.
27. Joskow, P. L., *Deregulation: Where Do We Go from Here?* Aei Press, 2009.

28. Koske, I, Wanner, I, Bitetti, R., and Barbiero, O., *The 2013 Update of the OECD's Database on Product Market Regulation-Policy Insights for OECD and Non-OECD Countries*, Economic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200, OECD, 2015.
29. Landy, M. K., Levin, M. A., and Shapiro, M., *Creating Competitive Markets: The Politics of Regulatory Reform*, Brookings Institutions Press, 2007.
30. Mulligan, C., and Shleifer, A., "The Extent of the Market and the Supply of Regul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0, 2005, 1445-1473.
31. Nicoletti, G., and Scarpetta, S., Do Regulatory Reforms in Product and Labor Markets Promote Employment?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ECB/CEPR Conference on "What Helps or Hinder Labor Market Adjustments in Europe," Frankfurt, 2004.
32. _____, "Regulation, Productivity, and Growth: OECD Evidence," *Economic Policy*, 36, 2003, 11-72.
33. OECD, *Competition Assessment Toolkit*, 2011.
34. _____, *Cutting Red Tape: National Strategies for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규제개혁과 행정간소화, OECD 서울센터 역, 2008), 2006.
35. _____, *Economic Surveys*, 2004.
36. _____, *Measuring Regulatory Quality*, 2008.
37. _____, *OECD Reviews of Regulatory Reform Korea: Progress in Implementing Regulatory Reform*, 2000.
38. _____, *Regulatory Impact Analysis: A Tool for Policy Coherence*, 2009.
39. _____, *Regulatory Policies in OECD Countries. Public Management Committee. Paris*, 2002.
40. _____, *The Eco-Wide Effects of the Regulatory Reform*. DAFPE/CP(96)21/REV1, 1996.
41. _____, *The OECD Report on Regulatory Reform Synthesis*, 1997.
42. Peterson, B. S., and Glab, J., *Rapid Descent: Deregulation and the Shakeout in the Airlines*, Simon & Schuster, 1994.
43. Shapiro, S., and Borie-Holtz, D., *The Politics of Regulatory Reform*, Routledge Research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Policy, Routledge, 2013.

〈 부 록 〉

〈표 10〉 산업별 규제개혁지수 개요

Industrial Classification	Regulation		Deregulation	
	mean	S. D	mean	S. D
산업별				
농업	14.40	21.15	36.50	42.68
임업	5.80	9.67	20.00	24.39
어업	13.60	17.95	24.30	32.66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공업	1.50	4.74	3.60	7.72
금속광업	1.50	4.74	1.50	4.74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2.10	4.70	10.10	18.98
광업 지원 서비스업	0.00	0.00	1.50	4.74
식료품 제조업	26.70	21.92	48.40	37.74
음료 제조업	0.90	2.85	15.20	25.89
담배 제조업	19.00	38.43	0.00	0.0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	-	-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	-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	-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9.60	29.25	8.70	12.6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2.50	12.30	18.60	32.8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5.00	22.81	36.40	47.5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5.00	9.76	12.00	18.5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50	4.74	0.60	1.90
1차 금속 제조업	3.00	9.49	0.00	0.0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0.00	0.00	4.90	11.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50	4.74	8.00	12.3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5.60	8.30	15.60	20.03
전기장비 제조업	5.60	10.13	3.30	7.8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70	10.00	10.40	10.5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2.90	16.88	2.80	7.2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00	0.00	5.60	9.61
가구 제조업	0.00	0.00	0.90	2.85
기타 제품 제조업	0.00	0.00	0.80	2.5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1.30	14.67	33.30	47.06
수도사업	6.20	13.46	8.60	13.0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5.40	12.93	4.90	9.60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9.30	15.43	25.80	35.42

환경 정화 및 복원업	2.00	6.32	0.30	0.95
종합 건설업	69.20	40.32	128.50	90.28
전문직별 공사업	46.80	25.13	111.60	102.41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2.80	8.85	2.00	6.32
도매 및 상품중개업	7.80	6.00	21.20	22.17
소매업: 자동차 제외	16.40	10.20	34.90	31.76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26.60	24.27	14.80	13.33
수상 운송업	5.30	9.48	18.40	12.85
항공 운송업	6.70	9.18	36.20	46.0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2.90	22.08	36.30	53.69
숙박업	13.60	16.93	17.00	20.53
음식점 및 주점업	27.90	19.91	14.00	15.60
출판업	3.70	5.08	8.00	20.59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7.90	9.17	9.40	14.05
방송업	27.30	23.90	29.40	51.03
통신업	14.00	13.98	38.20	74.0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0.00	0.00	0.90	2.85
정보서비스업	7.00	8.84	0.60	1.90
금융업	84.40	52.04	51.20	96.62
보험 및 연금업	15.40	17.41	21.70	36.93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6.20	11.01	12.90	25.99
부동산업	63.60	54.30	59.10	35.60
임대업: 부동산 제외				
연구개발업	8.60	9.09	12.90	40.79
전문서비스업	9.70	10.85	4.20	9.26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	15.60	6.54	11.40	18.00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50	8.54	1.30	2.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0.40	1.26	5.20	4.98
교육 서비스업	26.90	20.26	18.80	30.22
보건업	27.00	26.32	20.10	30.60
사회복지 서비스업	19.60	14.98	8.00	14.28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60	6.19	7.20	12.24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23.50	27.42	27.00	26.65
협회 및 단체	2.10	6.64	1.70	2.98
수리업	0.00	0.00	2.60	5.97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60	9.75	6.10	8.25
전 산업 일반	81.00	77.61	95.00	83.94
제조업 일반	17.80	15.66	78.80	51.77

〈표 11〉 산업별 규제개혁지수 개요

(단위: 명)

	단년도 규제개혁 효과				누적적 규제개혁 효과			
	모형 A-1: 동일연도	모형 A-2: 1년 후	모형 A-3: 3년 후	모형 A-4: 5년 후	3년 누적치		5년 누적치	
					모형 A-5: 1년 후	모형 A-6: 3년 후	모형 A-7: 3년 후	모형 A-8: 5년 후
규제폐지완화								
개별 산업	-19.4143 (25.2280)	-20.6554 (25.3469)	62.7373 (24.8719)**	67.8218 (22.4117)***	-105.965 (23.807)***	8.203 (25.560)	46.893 (27.590)*	-27.477 (45.215)
제조업 일반	-1.3213 (36.6358)	-16.4407 (36.8510)	38.4143 (40.1212)	-2.3335 (41.7231)	67.523 (69.079)	54.971 (72.799)	-213.948 (133.597)	-258.009 (266.332)
전산업 일반	-127.3132 (89.5017)	59.0994 (88.5254)	-16.0755 (86.1068)	-66.9555 (26.7146)**	711.669 (369.665)*	-4862.246 (1587.246)***	-79.763 (19.266)***	513.110 (202.847)**
순 규제폐지완화								
개별 산업	-29.5198 (25.8498)	-16.0510 (25.7809)	31.9244 (26.6513)	0.2157 (23.1381)	1.605 (24.468)	25.319 (25.994)	50.349 (29.186)*	-68.808 (42.200)
제조업 일반	-129.5835 (52.1548)**	-100.6160 (55.0937)*	-2.7931 (49.4912)	52.8339 (59.1016)	-211.296 (98.157)**	-158.462 (97.328)	65.364 (89.047)	70.945 (194.854)
전산업 일반	4.2718 (56.6271)	87.8065 (56.4374)	-66.3552 (37.4005)*	-5.1094 (15.6929)	8.632 (98.435)	-1016.479 (318.456)***	9.622 (53.826)	227.441 (75.498)***

주: *, $p < 0.1$, **, $p < 0.05$, ***, $p < 0.01$, 괄호안은 표준편차.

〈표 12〉 총자산 규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단위: 십억 원)

	단년도 규제개혁 효과				누적적 규제개혁 효과			
	모형 A-1: 동일연도	모형 A-2: 1년 후	모형 A-3: 3년 후	모형 A-4: 5년 후	3년 누적치		5년 누적치	
					모형 A-5: 1년 후	모형 A-6: 3년 후	모형 A-7: 3년 후	모형 A-8: 5년 후
규제폐지완화								
개별 산업	-6.4390 (11.6068)	1.6546 (12.3907)	3.3757 (11.9355)	23.0639 (11.2288)**	9.9849 (10.7634)	-17.6217 (10.6843)	-8.7907 (8.9112)	-15.4567 (13.8964)
제조업 일반	-10.7485 (12.7896)	-9.0564 (13.4507)	13.5138 (15.1579)	-42.0376 (19.2671)**	-38.9197 (29.0637)	15.3626 (30.0677)	21.9999 (45.1102)	-17.1605 (84.8636)
전산업 일반	41.9534 (31.9416)	19.7686 (33.6240)	-5.4310 (36.1388)	-19.9501 (12.3842)	271.3178 (161.1607)*	-1326.9328 (710.5723)*	-14.1749 (6.8152)**	79.1352 (72.7789)
순 규제폐지완화								
개별 산업	28.1087 (11.7026)**	21.1813 (12.5079)*	-14.6228 (13.9953)	17.4709 (12.1884)	11.4189 (13.6739)	12.8657 (12.6286)	1.6278 (10.8604)	-17.6656 (16.0257)
제조업 일반	-11.6236 (18.0396)	23.8088 (20.3910)	-20.0407 (21.5423)	76.4984 (28.9767)***	54.8094 (51.0148)	-9.3667 (41.3016)	-7.8604 (30.0160)	18.1910 (62.2130)
전산업 일반	11.1620 (19.8567)	-2.7650 (21.0494)	-9.5529 (15.5022)	-2.1002 (7.4938)	-37.6538 (41.0870)	-292.8151 (141.7558)**	6.4574 (19.6717)	34.9585 (27.1006)

주: *, $p < 0.1$, **, $p < 0.05$, ***, $p < 0.01$, 괄호안은 표준편차.

〈표 13〉 자본금 규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단위: 십억 원)

	단년도 규제개혁 효과				누적적 규제개혁 효과			
	모형 A-1: 동일연도	모형 A-2: 1년 후	모형 A-3: 3년 후	모형 A-4: 5년 후	3년 누적치		5년 누적치	
					모형 A-5: 1년 후	모형 A-6: 3년 후	모형 A-7: 3년 후	모형 A-8: 5년 후
규제폐지완화								
개별 산업	4.1256 (1.7604)**	1.8099 (1.9340)	-0.6934 (1.9010)	4.0040 (1.7817)**	0.4800 (1.1923)	-3.4886 (1.2372)***	0.4985 (1.2437)	-1.4402 (3.0981)
제조업 일반	-0.2384 (1.9427)	0.5776 (2.0955)	3.4376 (2.4134)	-6.5300 (2.9895)**	-4.3808 (3.2195)	1.7345 (3.4818)	-10.7211 (6.2959)*	-17.3227 (18.9200)
전산업 일반	1.2504 (4.7945)	5.0883 (5.1659)	-0.8061 (5.7557)	-3.9201 (1.9263)**	43.6114 (17.8522)***	-101.0372 (82.2839)	-1.3478 (0.9512)	15.1302 (0.3533)
	모형 B-1: 동일연도	모형 B-2: 1년 후	모형 B-3: 3년 후	모형 B-4: 5년 후	모형 B-5: 1년 후	모형 B-6: 3년 후	모형 B-7: 3년 후	모형 B-8: 5년 후
순 규제폐지완화								
개별 산업	6.4348 (1.7748)***	2.4953 (1.9390)	-3.3551 (2.2239)	5.8740 (1.9046)***	-1.0093 (1.5147)	2.0292 (1.4624)	7.3112 (1.5158)***	5.3745 (3.5729)
제조업 일반	-0.4146 (2.7397)	1.4724 (3.1595)	2.6730 (3.4616)	5.6385 (4.5794)	14.1021 (5.6510)**	-5.8073 (4.7827)	1.5914 (4.1893)	9.9786 (13.8701)
전산업 일반	1.2596 (2.9653)	3.0824 (3.2299)	-4.4938 (2.4759)*	0.0176 (1.1723)	-5.4564 (4.5513)	-22.5344 (16.4152)	-1.6571 (2.7455)	6.2073 (6.0420)

주: *, $p < 0.1$, **, $p < 0.05$, ***, $p < 0.01$, 괄호안은 표준편차.

〈표 14〉 자본생산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단위: %)

	단년도 규제개혁 효과				누적적 규제개혁 효과			
	모형 A-1: 동일연도	모형 A-2: 1년 후	모형 A-3: 3년 후	모형 A-4: 5년 후	3년 누적치		5년 누적치	
					모형 A-5: 1년 후	모형 A-6: 3년 후	모형 A-7: 3년 후	모형 A-8: 5년 후
규제폐지완화								
개별 산업	-0.0070 (0.0070)	-0.0021 (0.0081)	0.0034 (0.0072)	-0.0102 (0.0070)	0.0028 (0.0054)	-0.0016 (0.0050)	-0.0074 (0.0049)	0.0028 (0.0107)
제조업 일반	0.0084 (0.0078)	0.0064 (0.0088)	-0.0189 (0.0092)**	0.0212 (0.0120)*	0.0282 (0.0146)*	-0.0223 (0.0141)	-0.0156 (0.0248)	0.1037 (0.0673)
전산업 일반	-0.0427 (0.0193)**	-0.03547 (0.0218)	0.0536 (0.0220)**	0.0068 (0.0077)	-0.1708 (0.0810)**	0.3755 (0.3337)	0.0062 (0.0037)	-0.1384 (0.1384)**
	모형 B-1: 동일연도	모형 B-2: 1년 후	모형 B-3: 3년 후	모형 B-4: 5년 후	모형 B-5: 1년 후	모형 B-6: 3년 후	모형 B-7: 3년 후	모형 B-8: 5년 후
순 규제폐지완화								
개별 산업	-0.0041 (0.0071)	0.0048 (0.0082)	0.0102 (0.0085)	-0.0092 (0.0076)	0.0136 (0.0069)**	-0.0025 (0.0059)	-0.0076 (0.0060)	0.0074 (0.0123)
제조업 일반	-0.0125 (0.0110)	0.0091 (0.0133)	0.0159 (0.0131)	-0.0761 (0.0270)	-0.0530 (0.0257)**	0.0440 (0.0194)**	0.0185 (0.0165)	-0.0792 (0.0479)
전산업 일반	-0.0146 (0.0118)	-0.0343 (0.0136)**	0.0191 (0.0094)**	0.0110 (0.0047)**	0.0155 (0.0207)	0.0233 (0.0666)	-0.0197 (0.0108)*	-0.0518 (0.0209)**

주: *, $p < 0.1$, **, $p < 0.05$, ***, $p < 0.01$, 괄호안은 표준편차.

〈표 15〉 매출액영업이익률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단위: %)

	단년도 규제개혁 효과				누적적 규제개혁 효과			
	모형 A-1: 동일연도	모형 A-2: 1년 후	모형 A-3: 3년 후	모형 A-4: 5년 후	3년 누적치		5년 누적치	
					모형 A-5: 1년 후	모형 A-6: 3년 후	모형 A-7: 3년 후	모형 A-8: 5년 후
규제폐지완화								
개별 산업	0.0016 (0.0037)	0.0003 (0.0036)	0.0002 (0.0035)	-0.0069 (0.0032) **	0.0010 (0.0019)	-0.0015 (0.0019)	-0.0029 (0.0022)	-0.0051 (0.0042)
제조업 일반	0.0068 (0.0040) *	0.0063 (0.0039)	-0.0029 (0.0045)	0.0053 (0.0056)	0.0016 (0.0052)	-0.0035 (0.0053)	-0.0193 (0.0110) *	0.0069 (0.0256)
전산업 일반	-0.0278 (0.0100) ***	-0.0212 (0.0097) **	0.0052 (0.0107)	0.0007 (0.0036)	-0.0272 (0.0290)	0.1162 (0.1243)	0.0007 (0.0016)	-0.0041 (0.0220)
	모형 B-1: 동일연도	모형 B-2: 1년 후	모형 B-3: 3년 후	모형 B-4: 5년 후	모형 B-5: 1년 후	모형 B-6: 3년 후	모형 B-7: 3년 후	모형 B-8: 5년 후
순 규제폐지완화								
개별 산업	0.0029 (0.0037)	0.0059 (0.0036)	0.0002 (0.0042)	-0.0013 (0.0035)	0.0066 (0.0025) ***	0.0008 (0.0022)	0.0003 (0.0026)	-0.0048 (0.0048)
제조업 일반	0.0043 (0.0057)	0.0046 (0.0059)	0.0107 (0.0064) *	-0.0223 (0.0083) ***	-0.0038 (0.0139)	-0.0001 (0.0072)	0.0108 (0.0073)	-0.0136 (0.0188)
전산업 일반	-0.0179 (0.0062) ***	-0.0094 (0.0061)	-0.0017 (0.0046)	0.0013 (0.0022)	0.0050 (0.0074)	0.0224 (0.0248)	-0.0042 (0.0048)	-0.0011 (0.0082)

주: *, $p < 0.1$, **, $p < 0.05$, ***, $p < 0.01$, 괄호안은 표준편차.

〈표 16〉 총자산순이익률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단위: %)

	단년도 규제개혁 효과				누적적 규제개혁 효과			
	모형 A-1: 동일연도	모형 A-2: 1년 후	모형 A-3: 3년 후	모형 A-4: 5년 후	3년 누적치		5년 누적치	
					모형 A-5: 1년 후	모형 A-6: 3년 후	모형 A-7: 3년 후	모형 A-8: 5년 후
규제폐지완화								
개별 산업	0.0043 (0.0052)	-0.0027 (0.0047)	-0.0012 (0.0036)	-0.0058 (0.0035)*	0.0007 (0.0021)	-0.0018 (0.0020)	-0.0031 (0.0023)	-0.0031 (0.0053)
제조업 일반	-0.0006 (0.0057)	0.0044 (0.0052)	0.0011 (0.0045)	-0.0030 (0.0060)	0.0111 (0.0058)*	-0.0036 (0.0058)	-0.0142 (0.0117)	-0.0208 (0.0321)
전산업 일반	-0.0177 (0.0141)	-0.0161 (0.0128)	0.0096 (0.0108)	0.0028 (0.0039)	-0.0500 (0.0320)	0.0476 (0.1361)	0.0019 (0.0018)	-0.0090 (0.0275)
	모형 B-1: 동일연도	모형 B-2: 1년 후	모형 B-3: 3년 후	모형 B-4: 5년 후	모형 B-5: 1년 후	모형 B-6: 3년 후	모형 B-7: 3년 후	모형 B-8: 5년 후
순 규제폐지완화								
개별 산업	-0.0012 (0.0052)	0.0004 (0.0048)	0.0102 (0.0042)**	-0.0057 (0.0038)	0.0112 (0.0027)***	0.0006 (0.0024)	-0.0029 (0.0028)	-0.0076 (0.0061)
제조업 일반	0.0058 (0.0081)	-0.0021 (0.0078)	0.0142 (0.0064)**	-0.0064 (0.0091)	-0.0145 (0.0101)	0.0118 (0.0079)	0.0072 (0.0078)	0.0052 (0.0236)
전산업 일반	-0.0115 (0.0087)	-0.0091 (0.0080)	-0.0010 (0.0046)	0.0029 (0.0023)	0.0056 (0.0082)	-0.0054 (0.0271)	-0.0072 (0.0051)	-0.0026 (0.0103)

주: *, $p < 0.1$, **, $p < 0.05$, ***, $p < 0.01$, 괄호안은 표준편차.

Analysis of the Effects of Government Regulation Reform on National Industries with Regulation Reform Index

Minho Lee*

Abstract

In spite of offensive government regulation reform, citizen's recognition of the effects of regulation reform seems to be not satisfactory. This study intends to evaluate the policy effects of government regulation reform with empirical data by building up the regulation reform index.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earlier 10 years government deregulation policy seems to produce quite positive effects on the industrial performance. Especially, individual industries level deregulation has exerted much more effects on the profitability and the size of incumbent businesses. However, this analysis also indicates that the positive effects of the deregulation do not show strong and consistent results which also do not last longer than short-term periods.

Key Words: regulation reform, deregulation, policy effect

JEL Classification: G18

Received: June 30, 2016. Revised: July 11, 2016. Accepted: July 18, 2016.

*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35, Jinheung-ro, Eunpyeong-gu, Seoul 03367, Korea, Phone: +82-2-2007-0651, e-mail: mhlee@kipa.re.kr